

## 정부의 세율인하,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는 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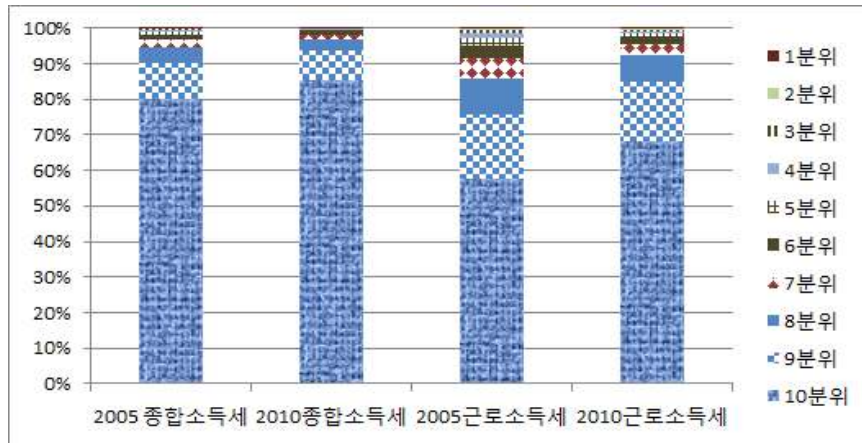
현 정권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은 직접세로서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를 인하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의 세금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여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른 수혜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려면 절대적인 세율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소득수준별로 세금부담을 얼마나 덜게 되었는가를 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 □ 소득 상위계층의 세부담 증가율이 중산층에 비하여 큰 것으로 분석됨

-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국세통계연보를 기초로 소득수준에 따른 세부담 증감을 분석<sup>1)</sup>해보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2005년과 2010년의 소득분위별 세부담률이 최상위층(10분위)은 80.0%에서 85.5%로 증가한 반면 중산층(4~7분위)은 4.98%에서 3.00%로 감소
  - 또한 결정세액 총액대비 소득상위 20%(9~10분위)의 부담률은 2005년 90.0%에서 2010년 93.6%로 증가하였으나 중산층(4~7분위) 및 저소득층(1~3분위)의 부담률은 4.9%에서 3.0%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원천세의 경우에도 소득분위별 세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2005년과 2009년<sup>2)</sup>의 고소득층(9~10분위)과 중간소득층(4~8분위)의 세부담률을 비교해보면 각각 75.5%에서 84.7%로 증가, 23.1%에서 14.5%로 감소로 나타남.
- 이는 단순히 세율의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의 규모가 고소득층의 절대적인 세액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여 부자만을 위한 감세로 공정성이 저해되었다는 평가를 하기에 는 무리가 있음을 의미함

1) 일부 논의에서 소득계층별 세부담 분석에 있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기초로 중산층의 세부담 증가율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것을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가계동향조사는 표본집단에 대한 설문조사형식의 자료로서 모집단의 성격을 대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소득대비 세부담 수준 분석시 소득과 무관한 항목인 비경상조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2) 2010년부터는 소득분위별 자료를 발표하지 않음



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2005년과 2010년 통계의 귀속년도는 각각 2004년과 2009년임.

□ 조세감면액의 증감률은 중소기업·서민·중산층에 대한 감면 증가가 더 두드러져

- 조세감면액을 분석<sup>3)</sup>해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가환급금 지급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던 것을 예외로 하면 정부의 지속적인 세제 정비 노력으로 하락 추세<sup>4)</sup>
  -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액은 2008년 35,631억원에서 2012년 46,047억원으로 30.1% 증가에 그친 반면 자영업자,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지출은 각각 13,917억원에서 25,477억원, 2,566억원에서 11,311억원으로 각각 83.1%, 340.8% 증가
  - 법인세의 경우 또한 총법인세액(38.0조원) 대비 중소기업의 법인세부담률은 18% 정도이지만 법인세 감면액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24.7% 수준으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조세감면을 받고 있음
  - 또한 중소기업·서민·중산층에 대한 조세감면 비중은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높으며, 2011년 58.2%에서 2012년 59.4%, 2013년 60.0% 수준으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율인하는 총수요와 총공급에 영향을 주어 생산과 고용, 그리고 궁극적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 현 정부의 세제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계층의 수혜를 타깃으로 했다기보다는 소비자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위축된 내수를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할 때 세율인하의 경제부양에 대한 효과를 같이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3) 대한민국정부, '2013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4) 동 자료에 의하면 국세감면율은 2009년 15.8%, 2010년 14.4%, 2011년 13.3% 이며 2012년(잠정) 12.8%, 2013년(전망) 12.1%로 감소하고 있음

- 무조건적 부자증세 또는 세율인상은 조세저항을 초래하고 경제위축 심화 위험
  - 이번 대선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을 가져왔던 부자증세와 복지재원 마련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상안은 세금 부과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공평성을 간과
  - 우리나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38%로 이미 미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의 최고세율 평균인 35.8% 보다 높은 수준인데 반하여 GDP대비 및 총 조세수입 대비 소득세수입의 비중은 3.3%와 14.1%로 OECD 회원국의 평균(각각 8.7%, 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많다는 것을 의미
  - 이와 같은 체계에서 단순히 세율 인상만을 고집하게 되면 성실히 신고하고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납세자에게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과세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특정계층을 목표로 하거나 재정확보를 위해 증세를 검토하기 이전에 기존 과세체계의 정비를 통해 공평성 제고 및 세원의 양성화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